

#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지원사례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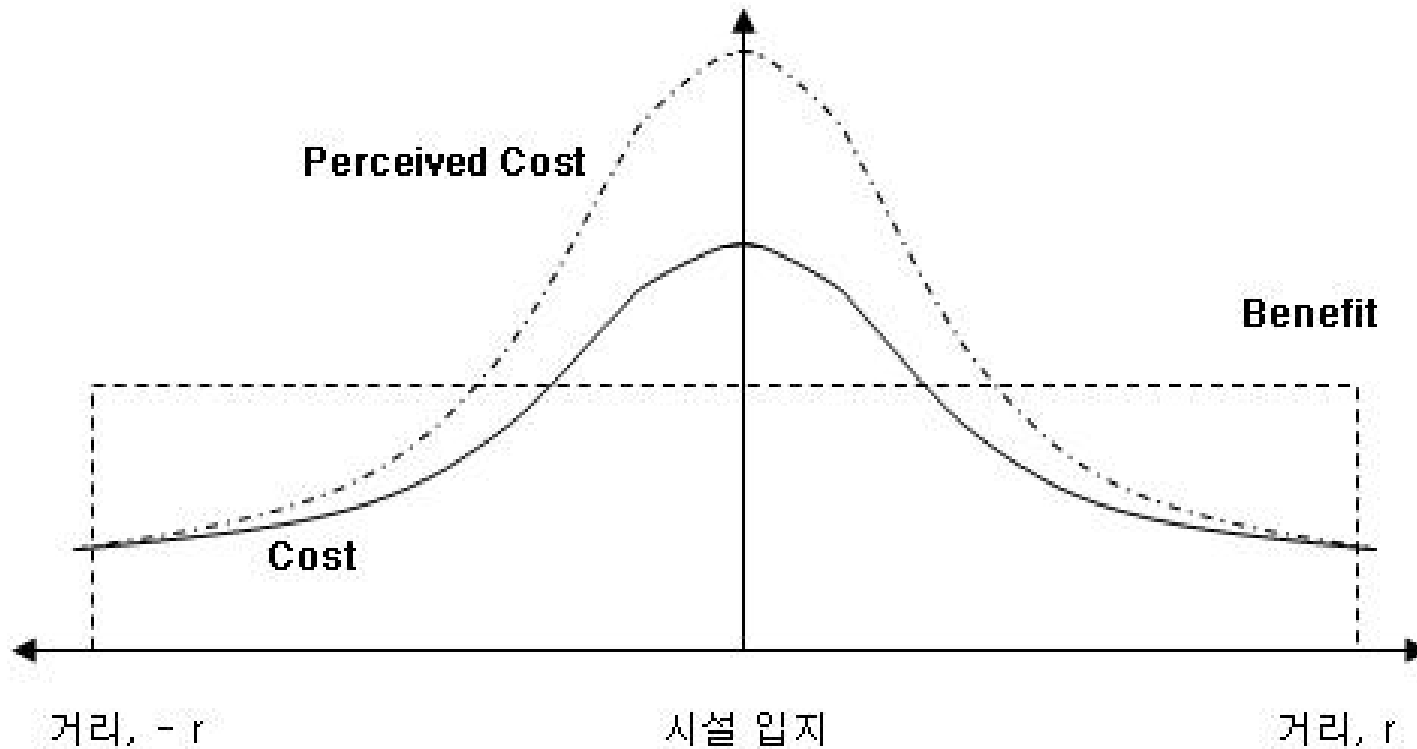
– 경주 방폐장 사례를 중심으로

정지범

갈등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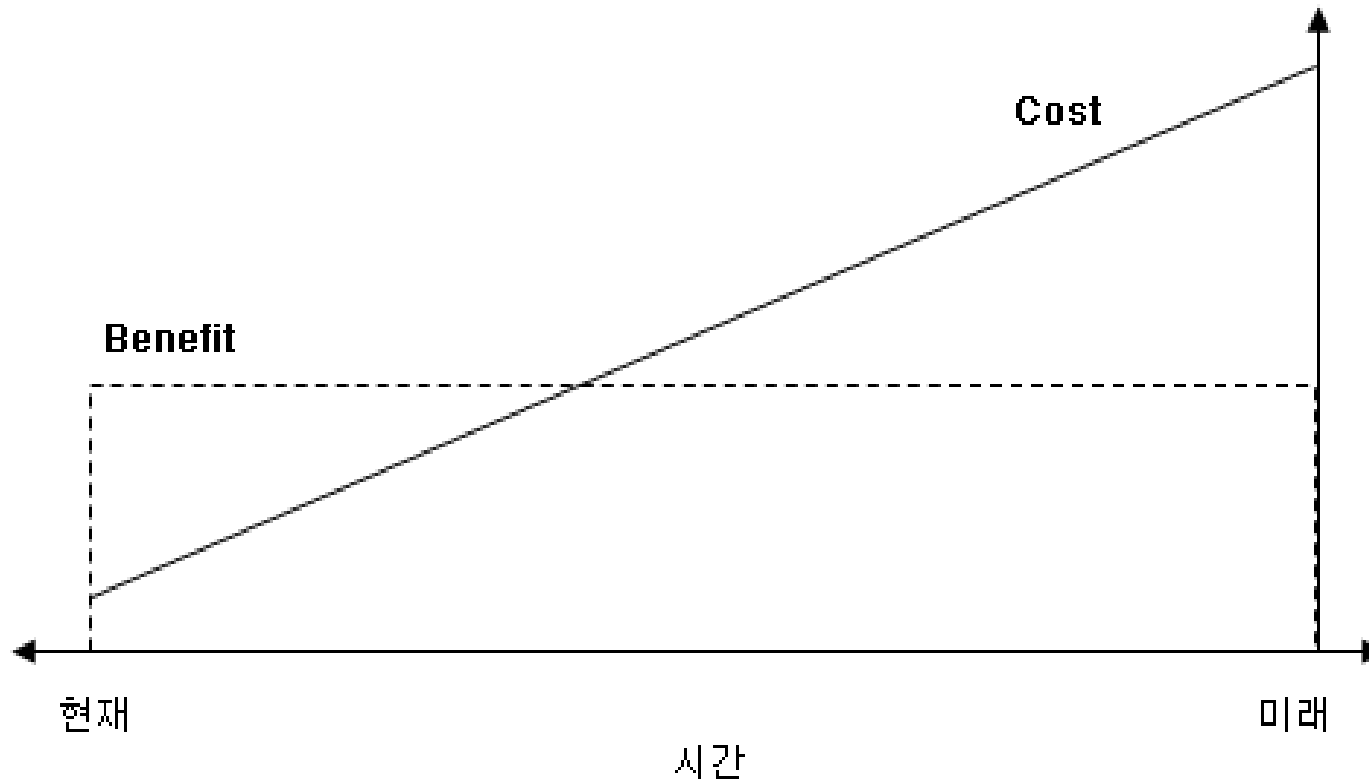
# 지역간 갈등 (공간적 차원)

- 환경이나 건강상의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는 발전소, 변전소, 폐기물처리장, 화장장 등
- 논리의 기본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적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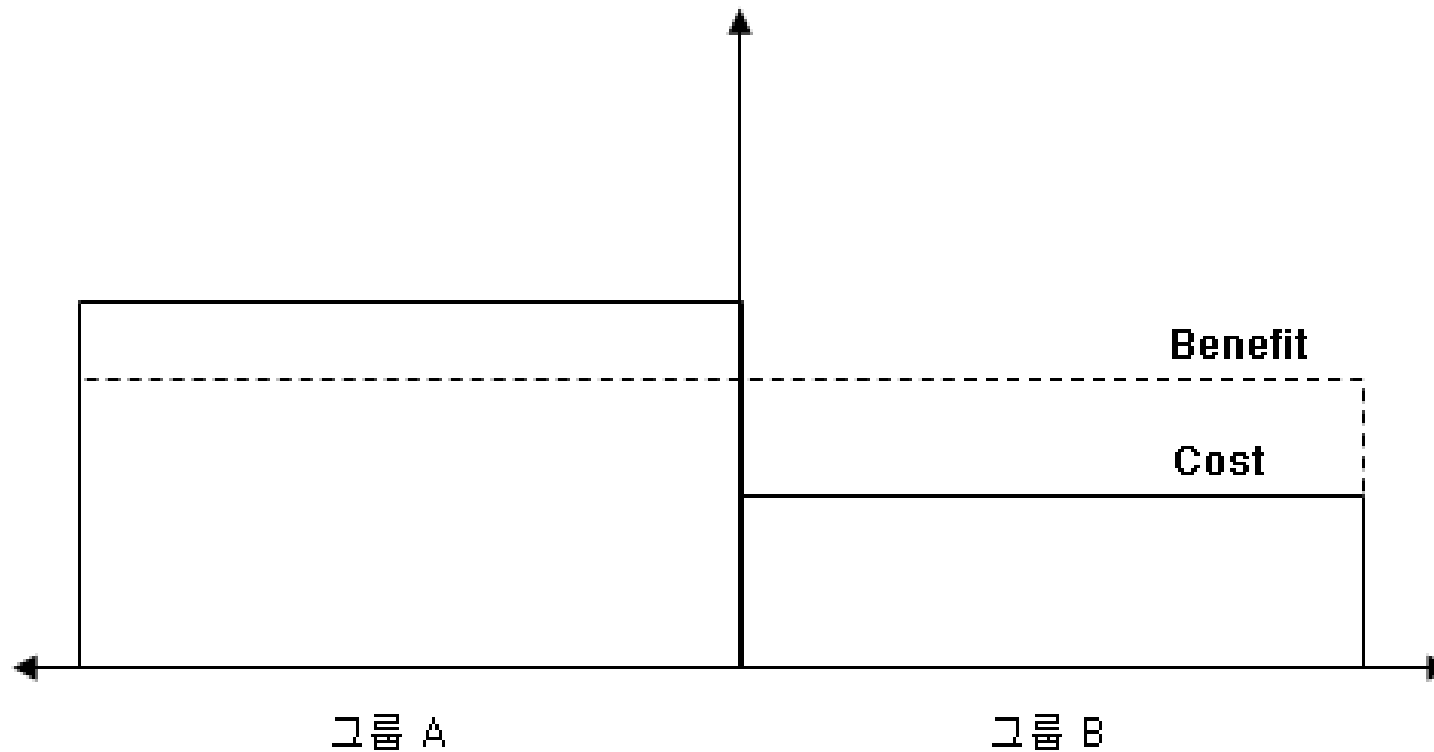
# 세대간 갈등 (시간적 불평등성)

- 원자력발전소 등 - 비용을 다음 세대(next generation)에 전가



# 집단 간 갈등

- 대표적인 예로는 지역 재개발 사업, 직업별 갈등



원자력 지역 지원 현황과 문제

# 방폐장 보상 사례

- 핀란드와 스웨덴 입지 후보지에서는 보상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했으나 학계의 비판적 분석에 따르면 보상은 입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 특히 두 나라에서는 보상(compensation)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표명하며 대신 Value Added Program 등의 용어를 선호하고 있음
  - 핀란드의 경우 보상금이 스웨덴과 한국에 비교하면 매우 적지만, 지역의 인구가 6천 명에 불과하며, 지자체 세수의 1/3을 원자력시설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핀란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스웨덴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한국 중저준위 방폐장
6.9 M € = 약 100 억원 + 기타 보상 (Posiva 본사 이전 등)	200 M € = 약 3,000 억원	3,000억원 + 기타 보상 (한수원 본사 이전 등)
위 보상액에서 매년 원자력 관련 시설로부터 얻어지는 세금, 핵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은 제외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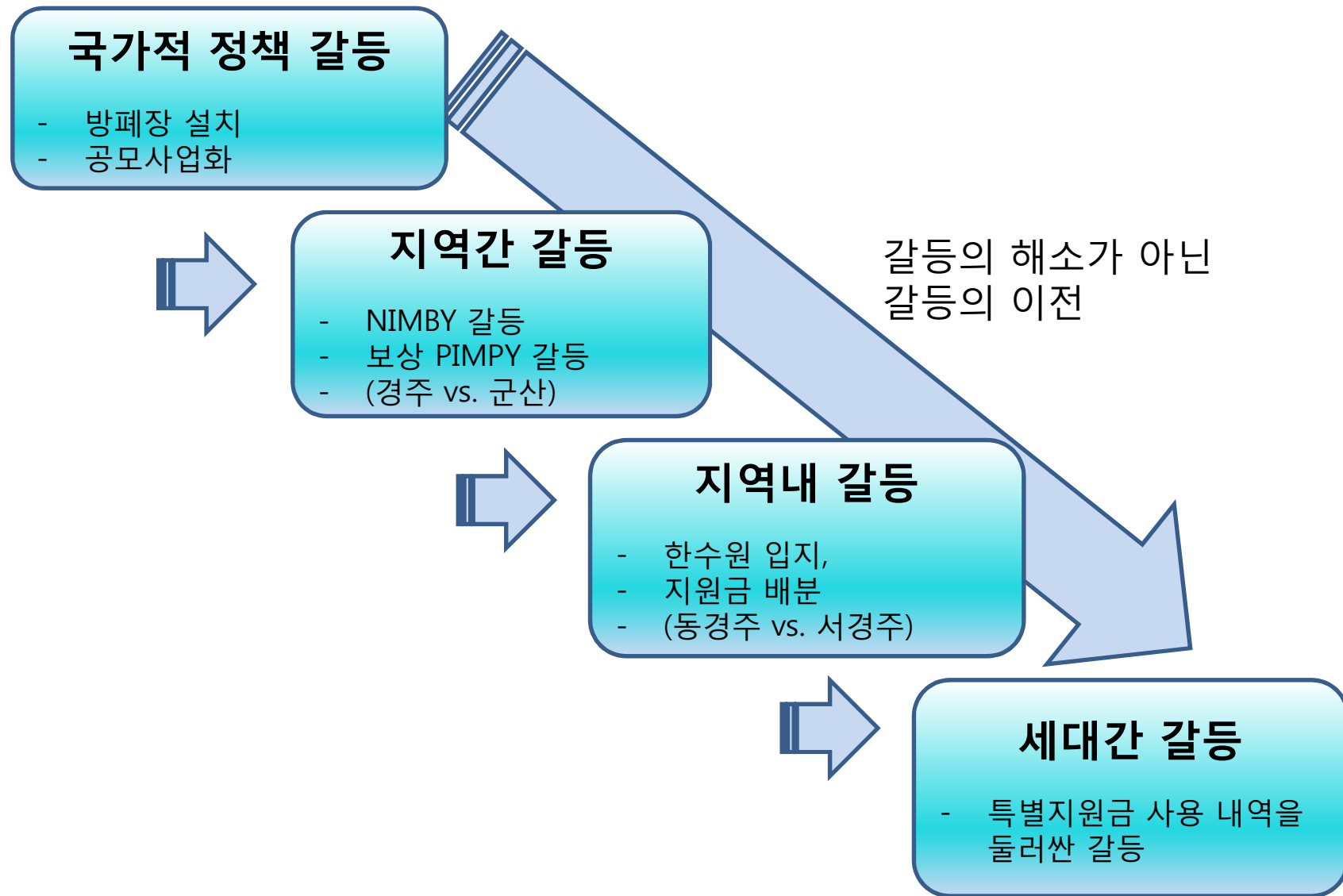
# 방폐장 보상 사례

- 일본의 사례

- 일본의 경우에도 원전 관련 시설에 대한 보상이 일반적임
  -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전력회사들은 원전 유치 지역에 약 300억엔을 쏟아 부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원전 유치 지역들은 이러한 지원에도 크게 발전하지 못했는데, 지역 지원금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역발전에 효과적이지 못했음
- 한편, 지자체들이 이러한 보조금에 중독되어(Addicted) 계속 보조금에 의존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는 비판이 존재
  - 많은 일본 원전유치 지역들은 지역의 원전이 노후화되면서 세수가 줄어들면 새로운 원전을 유치하려 노력하곤 함 (Samuels, Richard J., 2013)
- 결국 일본 원전시설 유치지역 역시 지역발전기금을 미래 세대를 위해 선순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 경주 방폐장 갈등의 흐름



# 유치 탈락 지역의 갈등 - 군산

- 주민투표 이후 군산이 탈락하면서 군산에서는 찬반 단체간 민민 갈등 및 민관 갈등이 발생
  - 유치를 반대한 GM대우차 노조 등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음
- 주민투표를 주도했으나 실패한 군산시청 등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실패한 후 비난과 박탈감에 시달림
- 스웨덴의 경우 고준위 방폐장 보상금의 대부분 (약 3,000억원 수준)을 방폐장을 유치한 Osthrammar가 아닌 탈락한 Oskarshamn에 지원
  - 탈락 지역에 대한 배려와 사회통합을 고려한 조치

# 입지 결정 후 지역 내 경쟁의 문제



경향신문 2006.12.29

한수원은 29일 "한수원 본사 이전부지를 양북면 장항리로 결정했다"며 "내년 1월부터 부지 매입에 들어가 10월쯤 실시 설계를 끝낸 뒤 착공, 2010년 10월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놓고 월성원전 주변 양북·감포·양남 등 동경주와 도심권은 모두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 도심권과 동경주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나뉘먹기식 결정이란 것이다. 동경주 주민들은 한수원 입지가 사실상 경주 도심과 동경주의 중간지대여서 기관 유치의 혜택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수철 동경주대책협의회 사무국장은 "사택이 도시에 건설돼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의 영업 등 지역경제에 큰 효과가 없고 동경주 주민들이 늘 주장해 온 원전과 방폐장의 안전성이나 생존권 보장도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현준 도심권범시민대책위 사무국장은 "경주의 균형발전과 침체된 도심권의 경제회생을 갈망하는 대다수 시민의 여론을 무시한 처사로 이는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동경주 주민들의 과격 시위를 염두에 두고 방폐장과 원전의 원활한 가동을 감안한 눈치보기식 입지 결정이라는 것이다.

도심권 주민들은 강경 시위와 백상승 경주시장 및 정종복 국회의원의 퇴진운동을 검토키로 했다. 경찰은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병력을 64개 중대로 크게 늘리고, 이 가운데 48개 중대를 도심권에 투입, 주민들의 과격 시위에 대비키로 했다.

# 한수寺의 탄생



# 특별지원금 사용 갈등

- 현재 vs. 미래
  - 의회 : 사회 인프라 확충과 동경주 지역 지원 등에 사용 요구
  - 3,000억 중 나머지 1,500억원에 대한 사용 결의안 내용 (2013.3.19 시의회 통과)
    - 1500억 원의 사용처로 원전과 방폐장이 있는 동경주 3개 읍면에 530억원을 지원하고
    - 봉길리 이주민 숙원사업에 20억원,
    - 그리고 양성자가속기 지원사업에 200억원,
    - 화랑 마을 및 아트빌리지 토지 매입비로 120억원,
    - 첨성로~나정교간 강변로 개설에 100억원,
    - 알천교~황성대교(알천북로)확장공사에 따른 토지보상비에 65억원
    -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에 100억원,
    - 장학기금 20억원,
    - 농어업발전기금 30억원,
    - 체육진흥기금 20억원,
    - 각 읍면별 지역균형개발에 260억원을 집행하겠다”
  - 시민단체 : 미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 경주경실련 측은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날 법원에 방폐장 특별지원금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



문제점과 개선 방안

#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지역공모사업에서 탈락한 지역의 아픔을 보살피 주지 못했음
  - 관련 갈등이 중앙에서 사업을 제안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의 배려가 필요
  - 탈락지역에 대한 갈등 치유 비용 및 제도적 지원 방안 필요
- 약속한 사업들이 지연되고, 변경되면서 주민 실망 가중
  - 특별지원금, 한수원 외에는 원래 계획된 사업이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으며, 이 사업들마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여 주민 실망 발생
  - 지원이 약속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히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중앙 차원의 지역 지원에 대한 사후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정부 신뢰 향상을 위해)
- 특별지원금 3,000억 사용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지원금이 내려오면서 지역간 갈등 만연
  - 로또의 비유, 마약 중독의 비유
  - 액수를 정해놓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 고려
  - 지역 사업계획은 실제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별 특색을 가진 사업이 되도록 운영 (Value Added Program)

# 어떻게 쓸 것인가?

- 그간 지역지원금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있었음
  - 그러나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험없는 지역 정치인에게 용처를 일임
  -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가 아닌 유권자를 위한 투자로 변질됨
- 지원금 사용에 대한 시장과 시의회에 대한 견제 장치 필요
  - 경주시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하지만 유명 무실
- 중앙차원의 지역지원금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용도의 명확화: 미래 세대를 위한 용도, 지출 용도를 한정
    - 장학기금, 지역사회 장기적 비전 마련을 위한 지출, 지역 발전 기금 조성, 지역 주민을 위한 벤처 펀드 등....
  - 계획의 명확화: 계획 없는 지출 없다.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 회계의 명확화: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용 불가